

04

자유 토론

김 제 환 충청도청 문화정책과 팀장

김 용 훈 영화진흥위원회 기반조성본부장

허 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장 성 각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구 재 준 서천기벌포영화관 센터장

박 정 배 청운대학교 교수

충청남도 영상진흥 사업추진 방향

김제환 | 충청남도 문화산업팀장(jekan@korea.kr)

I. 들어가며

1. '영상'의 의미와 道 영상진흥시책의 방향

1) '영상'의 의미

- 사전적 의미로는 콘텐츠중 하나로 '미디어의 내용물'이라 할 수 있음
 - * 콘텐츠 예시 : 영상콘텐츠, 문자콘텐츠, 웹툰, 부호 등
- 칸막이 생활*을 하고 있는 단절된 현대인의 삶에 하나의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
 - 영상콘텐츠를 통해 대화가 이뤄지고 흥미도 나누고 삶도 풍족

2. 충남 영상진흥시책의 방향

- 지역민 영상문화향유기회를 높여 삶을 풍족하게 하자
- 여기에(이러한 네트워크), 지역마케팅을 통해 관광 충남조성
- 작은영화관, 영상미디어센터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영상산업 효과 거양

II. 주요 현황

1. 제도적 기반

1) 충남영상위원회 설립 및 운영

- 설립목적 : 충남도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 영상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출범시기 : 2015년 7월 21일 충남영상위원회 출범
 - ↳ 충남문화산업진흥원내 비상설 자문기구로 설립
- 위원현황 : 김인수 위원장 외 선출직 15명, 당연직 2명 구성 (*현, 18명)
 - 선출직 : 15명(영화제작자, 감독, 법조계, 학자, 기업대표 등)
 - 당연직 : 2명(문화정책과장, 문화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 예산규모
 - 2017년, 영상위 운영 4억원(도비) / 수목콘텐츠 개발 4천5백만원(도비)

2) 충청남도 영상문화시설 협의체 구성

- 설립목적 : 영상문화시설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대 상 : 영상시설 보유한 8개 시군(운영주체), 문화산업진흥원
- 추진상황 : 사전모임(3. 22), 협의체 구성 반쪽(6. 5) → 시군주관부서장 협약
- 역 할 : 영상문화시설 운영계획과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제공 및
 에로사항 건의 등
- 구성체계



2. 영상산업 추진상황('17. 06월 현재)

1) 로케이션 제작지원 사업(인센티브)

- 사업기간 : 2017년 3월~12월(상시접수)
- 사 업 비 : 1억2천만원(작품당 5천만원까지 지급가능)
- 현 황 : 6건 접수

구분	작품명	제작사	제작비	배급/개봉	도내촬영지	진행상황	인센티브
장편 영화	범죄 도시	㈜비에이 엔터테인먼트	47억	17년 9월 개봉 예정	천안 일대	협약완료 지급예정	2100만원
장편 영화	이월	㈜부비락	2천만원	17년 영화제 출품 예정	천안 일대	정산완료 협약예정	300만원 (예상)
드라마	당찬 우리동네	주식회사 마이조이	21억	MBC드라마넷 6월 방영 예정	당진 일대	접수완료	-
영화	검객	오피스픽처스	50억	17년 개봉예정	부여 일대	접수완료	-
드라마	모히또	㈜실크우드	60억	방송국 협의중	당진 일대	접수완료	-



* 영화<범죄도시> 촬영현장 스틸컷

2) 충남 제류형 시나리오 기획개발 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3월~11월
- 사업비 : 2천만원(250만원~500만원)
- 현황 : 6개 작품선정(완료)

구분	작품명	제작사	신청자	지원금액	진행상황
장편영화	프락치	레이강볼 필름앤씨어터	이광우	500만원	1차 공주시 계룡면 (17.4.19~25)
장편영화	우주인 김만춘	㈜영화사불	조정준	400만원	1차 태안군 안면도 (17.5.17~19)
장편영화	냉궁마마	㈜감독의집	윤재연	300만원	준비중
장편영화	로드킬	㈜스토리공감	이군선	300만원	준비중
장편영화	내친구 광택이	씨네주유한회사	엄주영	250만원	준비중
장편영화	봄밤	㈜오존필름	홍성은	250만원	준비중



• 17.4.12 / 6작품 기획개발 지원사업 협약 및 정산안내

3) 영상산업관계자 팸투어 추진

- 사업기간 : 2017년 4월, 9월, 11월(연 3회)
- 사업비 : 700만원
- 현황 : 1차 영상관계자 팸투어 진행 완료(4월)
 - 개요 : 2017. 4. 20(목) ~ 21(금) / 2일간
 - 인원 : 35명(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충남영상위원 및 초청인사 등)
 - 장소 : 청양, 공주 일원



• 17.4.20 / 청양 칠갑산장승공원



• 17.4.21 / 공주 중동성당

4) 촬영지 발굴·기록화(로케이션 DB)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6월~11월
- 사업비 : 700만원
- 내용 : 「충남 로케이션 파트너」 6인 선정 및 활동 중
⇒ “빛·맛·끼”와 특색있는 순간의 촬영명소 발굴(100곳 이상)

III. 향후 계획

1. 지역마케팅 등 영상산업 활성화지원시스템 구축(기획 중)

<영화드라마 제작 지원 관련된 사항>

- 영화드라마 제작계획의 내용을 따져 단계별(1,2,3)로 적용하되 제작 계획의 전문성 등을 고려, 영상위원회와 협조기관인 시군과 협의 결정
→ 도 내부적으로 구상안을 확정하고 2018년 시군 및 영상위원회와 협의로 확정 예정

2. 「영상협의체」 도민 영상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도출 포럼

- 때 · 곳 : '17. 10월중 / 천안영상미디어센터(예정)
- 대상 : 도, 시군담당공무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작은 영화관 관계자 등
- 내용 : 영상미디어센터 및 작은 영화관 등 영상시설 운영관련 도민 영상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도출

3. 「도민영상 공모전」 개최

- 시기 : '17년 하반기 또는 '18년 중(계획)
- 내용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교육수료자의 영상제작역량 발휘 기회
 - 지역의 영상명소는 지역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제
 -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영상공모전 개최로 지역의 영상명소 발굴 및 영상제작역량 제고
 - 영상제작 능력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교육 실시

지역 영상문화 진흥 관련 정책방향

김용훈 | 영화진흥위원회 기반조성본부(dajoon@kofic.or.kr)

1. 배경

지역영상문화 증진 관련 영비법 개정 및 새정부 지역, 문화정책 등 추진에 따라 지역영상문화 진흥 관련 정책추진 방향 검토 필요

2. 최근 영상문화 관련법 제정 현황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문화복지를 증대하기 위한 법이 연속적으로 제정
 - * 문화기본법 제정(‘13.12.) : 국민 문화권 보장을 위한 신규법안 제정
 -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13.12.) : 국가, 지자체의 지역문화 진흥 책무 지정
 - * 영비법 개정(‘16.2.) :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지역 영상문화 증진’이 신설
-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예산확보는 더딘 상황
- 영비법 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이 영상문화 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상대적 부족

3. 주요 관련법의 내용

- ‘문화기본법’ 제정(‘13.12) : “국민 문화권” 보장을 위한 신규 법률 제정
 - ‘국민 문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 (제5조)문화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13.12) :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규정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
 -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제6조),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제10조), 지역문화실태조사(제11조), 지역문화재단(19조) 등 세부적 규정
- ‘영비법’ 개정(‘16.2.3) : “영상문화 증진”을 법 목적·계획에 명시
 - (제1조) 목적 : (현행)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개정)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
 - (제3조)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11의 2. 지역 영상문화의 증진(신설)
 - (제38조의 2) 지역 영상문화 증진을 위한 영화제작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
 - 제2항(신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증진을 위하여 영화제작을 직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4. 검토 사항

1)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추진 방안

- ① 영상문화활성화 사업의 지역간 격차 해소, 상향평준화 달성
 - 지역밀착·지역민 참여형 생활영상문화 시설 운영기반 조성
(광역 지자체 매칭, 영상미디어센터+ 공공전용관+ 찾아가는영화관)
 - 지역 영화창작·제작 기초인프라 구축 지원
(광역 지자체 매칭, 지역영화 창작 재정지원, 지역 로케이션 촬영 인센티브 지원)
- ② 영화발전기금의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 집행규모 확대
 - 영화진흥위원회 내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사업 담당조직 확대
⇒ 실태조사·분석·연구, 사업기획·집행 확대,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 전국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자체, 수행 단체 등)
 - 영화발전기금 사업예산 중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 편성 확대
⇒ 지역자치 사업체계 구축, 지역간/지역-중앙간 네트워크 형성
- ③ 지역내 영상생태계 형성을 위한 협력체계 추진
 - 중앙정부(+ 영화진흥위원회)가 협력하여 광역·기초 지자체와 지역사업 기획·집행 체계 기본원칙 마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약모델’ 도입, 영상문화 협력체계 구축
⇒ 중앙정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시행체계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상향평준화 요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역할 수행
 - 중앙정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영상문화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무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
 - 지역별 추진사업과 추진방식, 사업수행주체는 관할 지자체가 주관하여 결정

2) 지역 영상생태계 활성화 방안

- ① 광역 또는 권역 단위의 영상산업/영상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
 - 광역 또는 권역의 영상산업/영상문화 물적, 인적, 행정적 자원 현황 조사 연구
- ② 지역 영상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제도 현황
 - 영상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영화도서관(씨네마테크)), 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등)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수립
 - 지역 영화(영상물)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의 현황 및 과제

3) 지역 영상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기관)와 광역(권역) 지자체의 유기적 관계 설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

지역영상문화 +

허 경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reunion10@gmail.com)

I. 서론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는 자본/권력 중심의 문화를 극복하고 ‘국민문화주권시대’를 여는 것으로, ①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훼손하는 낡은 과거 혁신, ② 예술인 창작 자유 보장과 복지제도 등 창작 여건 강화, ③ 국민의 누릴 권한과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국민 생활(문화)시대, ④ 중소기업의 문화산업 참여 확대와 공정한 문화(산업)생태계, ⑤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역문화의 지평 확대 등이 5대 방향으로 제시됨.

지역영상문화는 국민문화주권의 주요한 분야로서 ③, ⑤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영상(영화)문화정책, 생활문화정책, 미디어교육(영화교육/문화예술교육)정책 등에 해당되거나 포함되어 있음.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발표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러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인 ‘복합·혁신과제’의 4번째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하였음.

국민문화주권으로 표현되는 새 정부의 주요 문화정책방향 역시, 지역문화분권을 통해 가능하며, ‘복합·혁신과제’로서 ‘지방분권’은 지역문화분권과도 긴밀한 연계해야 하는 상호촉진의 과제임.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주민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청년주거·일자리 등 정책과 지역문화·생활문화정책이 통합적으로 설계될 수 있어야 함.

II. 내용

- 영상문화 관련 문재인 후보 공약 현황

구 분	공약내용	
생활 문화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문화기술 역량 제고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에 메이커스페이스, 디지털 미디어랩 조성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유희공간 활용 다양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작은미술관/작은영화관/마을극장 등)
		실버극장 확충 및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생활문화동아리에 대한 연습/발표 공간과 예술강사 지원

- 영상문화 + 생활문화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상 생활문화시설에 포함

: 완주작은영화관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완주군생활문화동호회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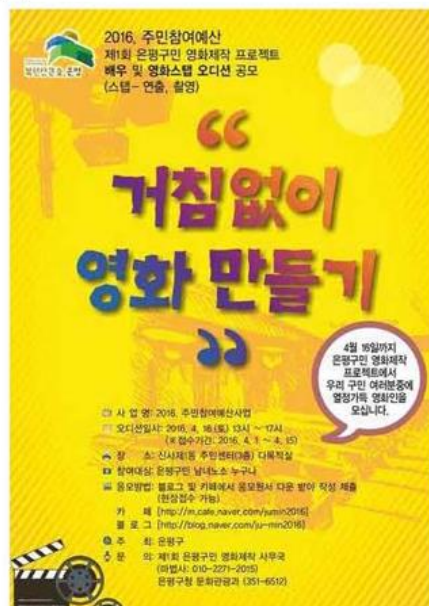
: 청소년 대상 영화교육 및 영상제작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모씨네'



자유로운 대화와 평등한 의사결정을 통해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습득하고, 집단창작 속에서 만끽하는 긍정적 예술경험을 통해 공동체적 관계 형성을 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청소년 대상 영화교육프로그램인 '모씨네 에듀' 운영

- 영상문화 + 주민자치/마을공동체

: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활용사례



: 광주 북구 중흥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광주지역독립영화인과 함께 하는, '제2회 간뎃골 영화제' (한편 중흥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복닥복닥 사람냄새나는 간뎃골 사랑방'을 조성, 향후 영화제 관련 배우 양성소, 시나리오 작업 및 주민들을 위한 영화상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부산 감만동 '참살이마을행복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마을극장'운영하는 등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 지원센터/단체 차원의 영화상영회 운영

III. 결론 및 시사점

- 주민(시민)참여 영상문화지원 정책 + 독립예술영화지원정책 등을 포괄/연계하는 지역영상문화정책 수립필요
- 향유/창조 등의 주민참여 영상문화활동이 지속적인 공동체활동/생활문화활동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설계 필요(문화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
-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주민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청년주거·일자리 등 정책과 지역문화·생활문화정책이 통합적으로 설계될 수 있어야 함.
- 위의 것들이 가능한, 전국/지역 수준의 협치체계가 종/횡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문화행정의 혁신이 추진되어야 함.
- 지역영상문화정책의 추진을 위한 영화진흥위원회의 방향/정책/사업 및 운영방식과 민간협치 체계가 혁신되어야 함.
- 별도자료, 지역영상문화진흥을 위한 정책협력 체계 재편방안 참조.

|참고문헌|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활성화에 담긴 과제들(2017년 6월 1일, '새정부문화정책, 문화사회를 향한 정책과제들' 토론회 자료집 중 김종휘 발제문)
단관극장 심폐소생술, 아카데미로의 초대(2017년 3월 3일,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총회 자료집 중 변혜원 발표자료)

작은영화관의 선순환구조 운영방식 도입에 관하여

장성각 | 충남문화산업진흥원(idea@ctia.kr)

영화 인프라의 지역적 편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문화소의 지역이 발생되고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시작으로 2010년 전북 장수에 처음으로 작은영화관이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 지역의 작은영화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 안정적인 운영 체제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도시 중심의 멀티플렉스가 수익구조를 만들어내는 접근과는 좀 다른, 작은영화관을 통해 주민들에게 영상문화 향유권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작은영화관의 수익이 선순환할 수 있는 지역의 영화 유통 생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남도내 8개 시·군의 각 기초단체들은 지역미디어센터 및 작은영화관, 독립영화전용관을 운영하거나 설립 중에 있으며, 이들 기구는 대부분 위탁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관련 기초단체와 영상문화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위탁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오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 향후 충청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수립방안도출을 위해 협의체를 제안하여 ‘충남영상문화시설운영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영상문화시설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언이 있어왔지만, 일부는 각 지역의 실정이 부합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나머지는 시의적절하지 않은 이상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에, 현재 충남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영상문화시설 운영방식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미디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지역민의 영상문화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체는 천안시로부터 운영 및 사업예산을 교부받아 ‘마을미디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영상 제작 작업이 매개가 되어, 소원하던 주민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소통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미디어사업’이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꾀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진 것과 달리 작은영화관은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지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는 동시에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독특한 특성을 지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서 적든 많은 간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의 사용은 각 지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아직 그 용처에 대해 지자체가 가진 지속가능한 정책이나 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영화관은 그 수익금을 지자체와 위탁기관이 일정한 비율로 배분을 하기도 하는데, 종종 위탁기관은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만 작은영화관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둘러싼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은영화관은 멀티플렉스가 도시에 집중되는 사이에, 상영관이 없는 문화 소외 지역주민들에게 영상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즉 인기 있는 상업영화를 비롯해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지역극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화관의 관객은 대다수 해당 지역주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

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작은영화관이 지역민들과 보다 오래 더 나은 문화향유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운영방식이 마련이 되어야합니다.

작은영화관은 수익 모델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의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한 운영방식이 도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한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작은영화관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점점 더 많이 이 영화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사랑이 증가하는 만큼의 수익금이 발생이 한다면, 역시 이 수익금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려 주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미디어센터가 설립되기 힘든 지역이라도 작은영화관을 거점으로 하여 미디어센터 기능을 도입해서 작은영화관 프로그램, 작은영화관 모데레이터 양성 같은 지역주민들이 향후 자기지역의 영상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또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데에 사용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소재의 담당기관이 중심이 되어, 기본적인 운영 예산을 보장을 해주면서 해당년의 수익금이 익년도 지역주민들의 문화프로그램에 재투입되어 운영하여 지역 영상 문화 향유와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 영상문화시설의 핵심 역할이어야 합니다.

충남지역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

구재준 |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기벌포영화관(anfangku@gmail.com)

I. 서론

1)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인 기벌포영화관의 센터장으로 근무해온 지난 16개월은 인구 56,000여명의 작은 지자체 주민들의 영상문화에 대한 갈증과 욕구를 확인해온 시기였습니다.

2)작은영화관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미디어센터가 지역영상문화의 중심지로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고 어떻게 주민들과 소통해야 하고 영상문화로 주민들을 어떻게 네트워킹해야 하는 지를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제 체험하고 배워온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 마을 공동체, 지역 커뮤니티 등에 영상문화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고 마을 공동체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영상미디어가 매우 유용한 매체라는 것도 확인해오고 있습니다.

3)영상문화가 문화인가? 그 효용성이 있는 가? 등에 대한 돌아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문화, 생활문화 등의 구체적 논의에서는 영상문화는 배제되고 있는 걸까?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던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지역영상문화라는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볼 필요도 있을 듯 싶습니다.

5)지역영상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수행 가능한 영상문화시설, 거버넌스 체계 및 소요예산 확보라는 3가지 축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I. 내용

1) 영상문화가 지역문화 또는 생활문화의 주요 영역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예술, 응용예술, 공연, 축제 등은 당연히 문화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고 중요하지만 영상문화는 문화진흥이라는 명제에서 배제되곤 하는 듯 합니다.

가장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매체이면서 주민의 광범위한 접근을 용이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매체라는 점 등, 그 효용성과 소구력이 강한 영상문화를 배제한 채 논의되고 수립되는 지역문화, 생활문화 정책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지역영상문화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큰 범주의 영역들 현황을 살펴보고 활성화의 필요성 및 나아갈 방향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지역영상문화의 개념을 영화, 영상 및 사진, 라디오 등 크게 3가지 미디어 문화영역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첫째, 주민의 영화향유권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서천군, 예산군 이외에 조성 중인 태안군, 금산군, 청양군에 작은영화관이 개관되면 충남 14개 시/군 전역에서 주민이 개봉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해야 할 점은 작은영화관이 주민들이 영화를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냄은 물론, 이를 통해 영화관을 운영할 역량을 보유한 지역주민들을 양성해내어 장기적으로는 주민조직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지자체들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만 바라보는 단기적 접근을 지양하고 장기적 관점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영화관이 영상 제작 체험/교육을 수행하는 공간이 되고 이를 통해

시민프로그래머, 영화감상동아리 및 영상제작동아리 모임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주민들이 지역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내고 표현해내도록 하는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작은영화관 단위조직 혼자서 이루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영 중인 천안, 서천 등 2개 미디어센터와 조성중인 서산, 홍성 등 총 4개 미디어센터를 활용하는 충남 전역을 아우르는 협업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충청남도 광역 차원의 전략 수립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한 지점이 될 듯 합니다.

둘째, 영상 및 사진 등 이미지를 다루는 분야에서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을 이끌어내고 이를 제작 동아리 모임 형태로 발전시켜서 시민제작영상 및 사진 등 생산물을 양성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나 해내야 할 일 이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영상미디어 읽기와 쓰기를 체득하고 이를 통해 지역이야기, 일상의 이야기들을 가장 감각적이고 소구력이 강한 영상미디어로 얘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상미디어는 마을공동체 및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매체중의 하나입니다.

미디어센터가 있는 지역은 미디어센터가 이를 수행해갈 수 있으나 미디어센터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 있는 미디어센터들을 활용하여 충남 전역에 영상미디어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충청남도 광역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운영 중인 영상 체험 및 교육버스인 시네놀이 버스 2대를 2018년 중 광역지자체 2곳에 이 관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1대를 이관받아 미디어센터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충남 전역에 영상 체험과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라디오입니다.

공동체라디오, 마을 라디오, 시민라디오 등 명칭과 무관하게 주민들이 가장 용이하게 참여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매체가 라디오 방송입니다.

충남 전역에서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이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미디어센터들의 역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충청남도 광역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천안, 서천, 서산, 홍성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시역에도 미디어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III. 결론 및 시사점

1. 무엇보다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1) 우선적으로 미디어센터 및 작은영화관 등 영상문화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조성중인 기초지자체 8곳을 중심으로 가칭 “충남영상문화시설운영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충청남도, 8개 지자체, 관련 충남 공공공기관은 물론 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영상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운영단체 또는 기관의 참여로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1) 현재 지역영상문화시설 조성단계에서는 충남도의 지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성 이후의 운영 비용은 전적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역 차원의 지원이 없이 지역영상문화시설들은 운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들이 지역영상문화시설 조성을 주저하는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영상문화분야에 충청남도 광역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7년 충청남도 예산 중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총 568억원입니다.

568억원 중 영상문화 또는 미디어문화 진흥 또는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2018년에는 문화예술분야 예산 중 적어도 3% 정도는 충남 지역영상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영상문화는 최소의 지원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감각적인 매체일수 있습니다.

작은 지자체인 서천군에서의 경험은 이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갖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영상문화도 문화의 주요 영역 중 하나임을 늘 기억하고 새기자고 제안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충남의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제언)

박정배 | 청운대학교(pjb@chungwoon.ac.kr)

I. 서론

정부의 영화분야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실제로 반영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많은 공적 기구들이 위원회라는 형태의 조직으로 개편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위원회 형식은 권위주의적인 관련기구와 달리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맺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의체 행정기구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는 국가 기구의 조직 구성 원리에서 시민사회를 포함시키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를 엿볼 수 있다.

1999년 영화진흥기구가 영화진흥공사에서 영화진흥위원회로 개편되고 영화심의기구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2000년 3월 처음으로 영화계와의 협의를 통해 영화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세워졌다.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 이라고 명명된 이 계획을 통해 한국영화계는 계획에 입각한 진흥정책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평가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최근 관객 내지 수용자에서 이용자로 변모해가고 있는 영상매체에 대한 대중의 사회적 위치의 변화과정이 거세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정치 경제 문화적 권리 투쟁의 과정을 동반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한편 영상이란 영화와 드라마, 비디오, 움직이는 화면으로 이루어진 광고 등 화면을 주요한 표현 수단으로 삼는 매체를 일컫는다. 여기서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여가수단이나 문화상품으로 즐기는 영화와 드라마로 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상문화 중 가장 대표적인 장르로서 드라마와 영화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문화산업과 연관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영상문화산업은 최고의 성장산업으로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역에서 영상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영상산업이 지식과 아이디어 집약산업으로서 거대한 자본이나 생산설비 없이도 다양한 창구효과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상산업은 지역 내의 관련 산업들과 연관효과 및 외부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시켜 지역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II. 문화거버넌스

거버넌스(governance)는 1980년대부터 대두된 통치 시스템의 개념으로 아직 정의에 대한 학문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Pierre & Peters(2000)에 의하면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다

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문화는 국민생활에 기본이고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화정책이다. 또한 지방정부와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중앙정부가 동반자적인 역할 없이는 문화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문화 분권의 필요성을 대두시켰으며, 문화 분권 없이 지역문화의 혁신과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거버넌스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즉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주민, 문화관련 예술단체 및 시민단체, 기업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문화거버넌스는 권한배분이나 관련 사무에 대한 기능배분도 중요하지만,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동반 관계, 주민과 영상문화산업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등을 통한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의 문화정책을 보면,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일괄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집행부/도의회 의 영상문화정책에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협의체 발족식에 맞춰 관련 기관들의 문화거버넌스 를 구축하기 위한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충남의 영상문화의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행위자들의 역할과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충남의 영상문화정책을 추진하는 주요조직으로는 우선 충청남도룰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중간조직으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영상위원회, 충남콘텐츠코리아 랩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문화단체, 영상문화단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추진하는 추진조직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적인 문화정책으로 가는 방향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 영상예술인, 영상예술기관, 단체들이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추진체계를 고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역영상문화진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으로 검토하거나 반영해야할만한 사항을 위해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의 영상문화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 산업적 기반뿐만 아니라 영상문화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지역 내 혁신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산 관 학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며 지역의 영상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영상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

III. 결론 및 시사점

영상 문화산업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성장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따라서 영상 문화산업은 지역 내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 고용창출 효과, 관광산업으로서의 역할, 삶의 질 향상, 지역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를 창출 시킬 수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충남도 이를 뒷받침하듯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영상위원회, 충남콘텐츠 코리아 랩, 지역의 크고 작은 극장, 시민참여영상 등 영상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효율적인 영상산업구조나 시설기반 구축은 미흡하며 지역의 영상산업 육성 정책 또한 서로 간의 연계 없이 계획, 시행되고 있어 분산적으로 위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상산업의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동반 관계, 주민과 영상예술기관, 단체 간의 협력 등을 통한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발표자들이 주장하는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일본 나라시 지방 소도시에서의 영상문화 활성화 사례,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및 협력 방안의 전북 사례 외에도 충청남도의 영상산업 클러스터 효율적 육성방안이나 충청남도 영상산업발전실무협의회 구성 및 전담 추진 부서의 신설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상문화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영상 현지 촬영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산업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홍보를 활발히 하고, 영상문화의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성 고취에 힘써야 한다. 끝으로 충남의 문화정책과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하에 충남 형(形)의 영상산업의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문화정책 기획과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지현, 한국 참여 영상 문화의 형성과 특징: 영상미디어운동을 중심으로, 2013,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p.55
- 김호균·김용민, 정부 간 문화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추진체계를 중심으로, 2013,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겸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483
- 류민호, 지역영상매체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2007, 한양대학교 대학원
- 류준호,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실태와 정책방향: 부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2011, 한국지방정부학회
- 류형진,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정책 연구: 2기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2005,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예술 전문사학위논문
- 박정배·최창현, 문화관광 융합 거버넌스의 국가간 비교분석, 2015,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4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서상아, 지역 영상문화 인프라 활성화 연구: 인천영상위원회의 위상과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200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황식, 지역문화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서구, 안동시, 의성군을 중심으로, 2007,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수복, 경기도 영상산업 클러스터 효율적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2008,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수(Yang shu), 한류 영상문화콘텐츠관심도가 한국미용성형의료관광에 미치는 영향, 2014,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13
-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안양시 영화산업 육성방안, 2002, p. 104
- Applebaugh, John. "Governance Working Group". 2015, ISAF.
- Jon Pierre, B. Guy Peters.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2000, St. Martin's Press